



## 》》 RoHS 지침, 결과 속이 다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럽연합(EU)의 RoHS 지침(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2006년 7월 1일 발효)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RoHS 지침이 우리 산업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요? 다들 '환경물질 규제' 나 '수출 차질' 이니 하면서 RoHS 지침을 걱정했는데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줄 세미나가 지난달 무역센터에서 열렸습니다. RoHS 미대응 제품 단속 절차라는 실질적인 주제의 세미나라서 그런지 준비된 자리(100석 예상)가 부족하여 보조 의자를 급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RoHS 지침은 EU가 지난 10년 전에 처음 언급한 사안으로 3년 전에 비로소 발효시기가 결정됐습니다. 법을 시행하겠다고 EU가 발표하자 기업들은 환경문제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유럽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니깐요. 하지만 정작 궁금한 건 EU가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제재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RoHS 지침에는 규제한다고만 나와 있지 어떻게 규제하고,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어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해 상세하게 규제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어리둥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날, 발표자로 나선 LG전자 최광립 부장은 이러한 현상을 '법 문화' 에서 찾습니다. 유럽은 '하지 말라' 고 하면 안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큰 법령은 있되 우리처럼 세세한 규칙까지 정해 놓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니깐. 국내 기업이 참고할 만한 지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영국 통산산업부(DTI)가 만든 RoHS 지침에 대한 가이드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EU 각 나라가 RoHS 지침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이드스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단속 권한은 우리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정부부서가 담당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자체 법률적 해석에 따라 법규 내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RoHS 지침 적용 대상 제품은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단, 7월 1일 이전에 들어간 제품의 수리용 부품은 제외되며, 재이용(reuse)된 제품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oHS 규제는 만족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된 것은 없지만 생산자는 소재/부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자는 기술적 자료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제품이 RoHS 지침을 만족함을 규제 당국에 증명해야 하며 그 기록은 시장 출시 후 4년 동안 보존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약식 기소 시 최대 5,000 파운드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벌금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약식 기소 후에 재판을 거치면 무한대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를 위주로 설명했지만, 각 나라마다 단속 절차가 다르므로 수출업체는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 3월 1일부로 발효되는 중국의 RoHS 지침도 우리에게 무역 장벽이 될 전망입니다. CCC 마크(강제인증 마크) 규정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EU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RoHS 지침에 겁을 내도 안되겠지만 얇잡아 봐서도 안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 듯이 천천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